

# 조선업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임금을 인상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조선업 노동자들이 지난 9월 1차 공동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늘(17일) 2차 파업에 나섰다. 사용자들은 이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잔업·특근에 차별을 주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조선업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강요받았다. 임금은 동결되거나 절끔 올랐다. 수많은 중소조선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사내하청 노동자

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이 가중됐다. 그래서 조선업 노동자들은 파업과 공동 투쟁에 나섰다.

“일부 언론들이 배부른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따로 싸워서 각개격파 당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 수익은 다 챙기고 손실만 떠넘기나?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박근혜 정부에게 조선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보수언론은 “위기에 웬 파업”이냐지만, 노동자들은 결코 위기에 책임이 없다. 더구나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감당 못할 상황이 아니다.

예컨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만 4조 5천2백26억 원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이 타 법인에 출자

한 금액은 2조 3천억 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현대자동차에 투자됐다. 이런 돈의 일부만 써도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사측이 대규모 수익을 거둘 때 노동자들은 그 과실을 받은 바 없다. 수익이 날 때는 사측이 다 가로채더니, 경영진의 저가 수주로 생긴 손실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더구나 중대재해 근절, 고용 안정 등의 요구는 목숨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다.



##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사측은 지금 저가 수주로 본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정부·여당까지 나서 조선업 파업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물러서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오늘 파업을 힘있게 치러내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 이를 효과

적으로 하려면, 하청 노동자들을 파업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함께 내세우며 그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런 원하청 연대는 보수언론과 지배자들이 ‘노동 귀족’ 운운하며 공격하는 데 맞서는 데도 유리하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속도 내는 박근혜 정부

##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자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재앙”일 뿐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었다. 정부는 즉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어제(16일)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통상임금 억제,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 법 개악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이에,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갈을 빼든 만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조선업 사용자들에게도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맞서 투쟁에 나서자.

#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조선업 위기가 심화돼 왔다. 지난 몇 년간 중소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처럼 이들도 막대한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양플랜트를 무더기로 저가 수주한 것이 지난해부터 큰 손실로 돌아왔다. 게다가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과 전 세계 소비 정체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는 급격히 줄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성장 둔화로 일반상선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빅3 모두에서 사측은 '수조 원 손실을 부각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중소형 조선소 — 정부가 고용에 투자하라

지난 수년간 중소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최근에 정부는 중소 조선소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나서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 위탁경영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 조선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책임과 능력이 있다. 정부가 지원을 늘려 중소 조선소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

## 위기지만, 생산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빅3

그러나 지금의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싸우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빅3는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고 비용을 절감해야 하지만, 동시에 쌓여 있는 물량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생산직 노동자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물론 불안정한 하청 노동자로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말이다.)

한국의 상반기 선박 수주량은 5백 92만 CGT를 기록해, 지난해 비해 4퍼센트밖에 줄지 않았다. 빅3가 주력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의 발주가 늘거나 별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측은 지금 일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에 2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본 현대중공업도 하청 노동자를 4천 명이나 늘렸다. 최근에도 물량팀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가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이 업무를 거부하며 반발하자, 현대중공업 사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정

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해고에 맞서 함께 싸워 승리한 사례도 있다.

요컨대, 사측이 공기를 맞추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은 파업 투쟁이 사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런 조건을 이용해 강력히 싸운다면, 우리 쪽에 승산이 있다.

## 산재 근절

#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조선소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필요 인력의 대부분을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충원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특히,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였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물량팀)이 늘고,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이 이뤄졌다.

수십 년 동안 힘든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해 온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위 '골병'이라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조선업 노조들이 요구해 온 다단계하도급을 금지, 안전 관리·감독을 실질화, 무리한 공기 단축 금지, 작업중지권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률과 노동계급의 힘은 반비례한다.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